

“1세기 전 장비 주고선... 인구절벽시대 전력보강?”

예비군을 부탁해

〈중〉실질 예비전력 강화 뒷전

M60 기관총 등 노후장비 지원
탄약 등 전방부대와 호환 안돼

통신장비·전투장구 턱없이 부족
대대별 ‘물자 몰아주기’ 하기도

전시에 옛날 일본군인 처럼
‘반자이’ 외치며 옥쇄 할 지경



일본육상자위대는 별도의 예비자위관 사이트를 통해, 자위대원의 훈련 수당 및 근속수당, 예비자위관 채용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금부금 등 실질적 혜택과 함께 방위백서 등에도 예비군의 활동과 의견을 과감히 싣고 있다. /육상자위대 홈페이지



제60동원사단 소속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이 4.2인치 박격포 조포훈련 중이다. 이들은 지원자로 구성된 예비군들이다. /육군 블로그

육군은 2014년 전시즉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73사단과 37사단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소령이하의 예비역간부가 2박3일의 동원예비군훈련을 포함해 연간 최대 30일까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육군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확장형'이라 불리는 '평시 복무간부예비군' 제도도 시험시행할 계획이다. 평시복무예비군은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정부대에서 복무하게 된다.

당초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지원대상은 동원예비군훈련 부가자인 6년차 이하 간부예비군이였다.

그렇지만 연차를 넘긴 예비군들이 간부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이겠다며 지원신청이 늘자, 육군은 시행부대와 지원가능 예비군연차 및 계급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일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은 소집의무외에 현역장병과 장거리 행군에 나서는 등 소속부대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체 예비군의 약 92% 이상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육군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보이자, 해군과 해병대도 지난해 진해기지사령부 등 일부 부대에 한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모집했다. 공군은 올해부터 제1전투비행단(광주)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에 한해 중사, 중위, 대위 계급의 예비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전시즉응성 목적? 현실은 1세기 전 장비 전시즉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및 선진 군사강국의 예비군제도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인구절벽과 병력자원 부족현상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선진 군사강국들은 숙련도 높은 병력자원을 유사시에 즉각 투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힘써왔다.

육군 평가분석단 관계자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 도입 2년차이던 2016년 1월 "(제도 도입으로)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었고 소요 비용 대비 만족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제도 도입 목적으로하는 전시즉응성을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열악한 복무시설과 현역 대비 부족한 개인피복 지원, 후방 지역방위 사단보다 노후되고 부족한 전투장비 및 보급품이 발목을 잡는다. 전방군단을 후속지원해야 하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들의

경우, 전방부대와 통신소통이 가능한 통신장비와 호환이 가능한 탄약과 장비가 보급돼야 하지만, 지금은 도태된 PRC-77과 PRC-85K, 5.56mm 탄약 대신 7.62mm탄약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 등이 지원하기로 보급된다.

◆할아버지급 장비마저 부족... '반자이' 돌격' 뿐

한 세기 전에 폐기돼야 할 장비들이 예비군 부대물자로 편성이 되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에 편성된 PRC-85K 무전기는 편제대비 보유율이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90mm 무반동총과 M60 기관총은 100%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25년의 내구연한을 넘겼다.

일부 동원지원단은 기본적인 총기와 통신장비, 개인전투장구가 턱없이 부족해 전시동원계획에 따로 소집이 빠른 동원보충대대에 물자를 전부 몰아

줘야 할 정도다. 최근 군 내부조사에 따르면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10개 동원지원단의 평균 장비 보유율은 58%에 불과했다.

동원예비군 부대의 견인포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편제된 155mm 견인포는 젊은 예비군들이 다뤄본적도 없는 도태장비다. 견인포를 끌어야 할 동원차량은 전시에만 동원이 가능하고, 설령 동원이 가능해도 견인포를 민간트럭에 연결하는 장치를 달 수가 없어, 사람이 끌어야 한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비롯해 275만 예비군은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처럼 앞서 죽은 자의 장비를 쫓거나, 구 일본군처럼 '반자이(만세)' 돌격을 외치며 옥쇄하는 길 밖에 없다. 상비군을 감축하면서 예비전력의 실질적 전력강화는 뒷전이다.

20년 이상 예비전력예산은 전체국방예산 대비 0.3~0.4%에 머물러 왔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3.5%가 증액된 234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국방예산의 0.44%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 대비 15%가 예비전력예산이다.

예비역복무의무가 아닌 일본도 국방예산 대비 5%가 예비전력예산이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정부와 국회는 예비군보다 한척당 2~4조원 이상이 들어갈 경항공모함 도입에 산에만 힘을 주고 있기에 야전에서는 한숨만 쉬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정권 심판론’ 의식?... 文과 거리두는 與

‘대통령에 실망’ 지지율 하락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청년세대 마음 헤아리지 못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집권 후반기 치르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 국민이 실망한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올해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생각도 ‘정권 심판’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 지지 혹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정부·여당 지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심판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바짝 앞드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논란 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민주당에 분노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당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각종 논란에 사과한 데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계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난다’는 내용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4년 SNS 글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구두 논평에서 “내일(2일)이 사전투표 일인데, 오늘(1일)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면, 도대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을 얼마나 알잡아 보는 작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K-방역 10대 품목’ 맞춤형 수출 지원

정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유망품목 발굴, 지원체계 마련

정부가 K-방역 10대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수출을 주도하는 마스크 등은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진단키트 등은 제품화 소요 단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K-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은 2223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1% 이상 성장했다.

정부는 그간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과 K-방역모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해왔으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됐고,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K-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등을 마련한다.

우선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격차가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은 ODA,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신흥 유망 시장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기진출 시장은 K-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력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시장 위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과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의 품목은 미국 FDA, 유럽연합 CE 등 국가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 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과 실증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 등의 품목의 경우 제품화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지적권 확보,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방역본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와 제품실패성 제고 지원에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